

與 “형소법 예정대로 추진” 野 “사법부 역사 큰 오점”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

민주 “당연한 결정…헌법 굳건”
12일 본회의 개정안 상정 처리
국힘 “입법·정치적 대응 나설 것”

여야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건 기일이 연기됐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

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 인용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면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

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전에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찬대 “당 차원 물가관리TF 구성”… 정부 뒷받침

“경제 회복 추정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떡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

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재정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나서겠다”며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이 침체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광주시당 “학동 붕괴 참사 재발 방지책 수립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9일 학동 붕괴 참사 4주기를 맞아 재발 방지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당은 “학동 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물 안전조치 미이행, 관계 기관의 책임 방기 등 복합적 인재”라며 “관리·감독의 부실, 무리한 철거 일정, 공사 관계자들의 안일함과 이윤 중심 행태,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거·재개발 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 △안전조치 미비 단속 △공공 감시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정성현 기자

대통령경호처 인적 쇄신… 본부장급 전원 대기발령

경호처 “국민께 진솔한 사죄”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한열 열사 제38주기 추모식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상호(왼쪽)가 함께 추모식을 치르는 모습. 업화 이사장이 9일 서울 연세대학교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 오는 13·16일 새 원내 사령탑 뽑는다

민주, 김병기·서영교 2파전 ‘후끈’ 20% 반영 권리당원 표심 구애전 국힘, 김도읍·김상훈·박대출 등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각각 13일과 16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3선 김병기, 4선 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는 의원 투표(80%)뿐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도 20% 반영한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구애전이 치열하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은 국회의원 34명의 표와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의원들과의 긴밀한 ‘스킵십’이 선거운동의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

당 안팎에서는 전국의 권리당원과 일일

이 접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과 SNS 등을 통한 ‘공중전’에서 당원 맞춤형 메시지가 늘어났다는 평이 나온다.

김병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당원 동지들께 올리는 글’에서 “대선 승리와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힘은 오로지 당원 동지들의 헌신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최종 병기’로 누가 적합한지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사위에서 내란 특검 등 세 개의 특검(입법) 활동을 했고, 행안위원장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예산들을 만들어 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 지도부와 당내 최대 계파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권리당원의 표심이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명실상부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이라며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뜻이 반영되는 만큼 많은 참여로 당원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 소병훈·송옥주 의원을 위촉했다.

또 최고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중앙위원회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해 이를 채워넣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추대방식으로 선출된다. 경선 참여를 위한 기탁금은 2000만원이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에서 선출된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현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자전타전으로 거론된다.

서울=김선욱 기자